

# 2026년 중국 경제 점검과 전망

박진오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소장



2025년 중국 경제는 실질 GDP 성장률 5%를 달성하였으나, 내수 부진과 부동산 투자 감소 등 부문별 경제 지표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하며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2026년은 양회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신규 인프라 투자와 민생 보장 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부양하고 경제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과 녹색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향후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

년은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15·5 계획)'이 시작되는 첫해로,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중국은 차세대 정보기술, AI, 양자 기술, 로봇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미래 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자원을 연초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전치발력(前置发力, 조기 집행)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AI 모델 훈련을 위한 국가 통합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등 지능형 경제의 기반이 되는 신형 인프라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조기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1. 최근 주요 지표와 특징

2026년 1사분기 중국 경제는 실질 GDP 성장률 5.0%를 기록하며 양호한 출발을 알렸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반영한 명목 GDP 성장률 역시 4.94%를 기록하며 이에 부합하는 오름세인 흐름을 보였다. 이번 성장의 강력한 견인차는 단연 '외수(外需)'였다. 전기차, 리튬 배터리, 풍력발전기 자재 등 이른바 '신삼양' 제품과 녹색 기술 품목이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5%, 50.4%, 45.2%의 폭발적인 급증세를 기록하며 총수출 증가율의 60% 이상을 견인했으며, 집적회로(IC)<sup>1)</sup>, 선박 등 고부가가치 품목도 수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하였다.<sup>2)</sup> 특히 무역 마찰 속에서도 미국 시장의 영향력 감소를 아세안(ASEAN),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신흥 시장과의 무역 파트너십 다변화로 상쇄하며 외수의 회복력을 입증했다.<sup>3)</sup> 전체 수출입은 1사분기 11.8조 위안으로 18.0%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동기대비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는데, 수입이 22.7%, 수출은 14.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의 경우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22.7%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주 수입품목은 집적회로, 과학기술상품, 자동데이터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중국 제조업 전환의 단면을 보인다. 여기에 지정학적 긴장 지속으로 자원, 곡물, 금속 등 원자재의 선제적 확보 수요가 더해진 것도 큰 폭의 수입 증가율을 기록하는데 이바지했다. 1사분

기 소비의 경우 분화 현상을 보였는데, 전체 소매판매는 2.4% 증가율에 그쳤으나, 이 중 통신기자재와 문화사무용품 판매가 각각 27.3%와 15.0%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소비를 견인했다. 서비스 소비증가율이 5.5%로 상품 소비 증가율 대비 약 33% 초과하였는데, 이는 춘절 기간 외출과 이동, 외식 소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공업생산의 경우 3월 제조업 PMI는 50.4를 기록했는데, 이 중 장비 제조업이 51.5, 고도기술 제조업이 52.1, 전략적 신흥산업(EPMI)<sup>4)</sup>이 57.6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하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 분야의 투자 증가가 동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산업 생산 측면에서 1사분기 제조업 부가가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성장하며 GDP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특히 규모 이상 고도기술 제조업(12.5%)과 장비 제조업(8.9%)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호조세는 중국 정부가 그간 전통 산업의 녹색 전환과 신흥산업 육성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시멘트, 철강 등 전통 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 및 설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저효율에서 고효율 생산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전략적 구상이 실질적인 관련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1) 2025년 집적회로 수출은 26.6% 증가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하였으며, 2026년 1사분기 이 분야 생산은 동기대비 24.3% 증가함.
- 2) 20세기 80년대 초와 90년대를 거쳐 21세기 초까지 중국 공업 수출의 약 70%가 노동집약적 상품(방직, 복장, 가방, 모자, 신발, 완구 등)이었으며, 나머지 30% 정도가 전기 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작금의 주요 제조업 분야 상품 수출이었으나, 이미 2023년도에 이와 같은 첨단 제조업의 핵심 상품과 기자재 등의 수출 비중이 90%에 달하고 나머지 10%만이 상기 언급한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이 차지함.(黄奇帆, 刘世锦, 蔡昉(2025), 中国经济解码, p.9, 中国经济周刊, 12位经济学家的思享课)
- 3) 2025년 순 수출의 GDP 성장 기여율은 33%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추세는 2026년 초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 중국의 대(對)동남아 수출은 13.4%, 대(對)아프리카 수출은 25.7% 각각 증가함.
- 4) EPMI(Emerging Industries PMI): '신흥 전략 산업 구매관리자지수'로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과 거시경제 조사기관인 중채자문(中采咨询이 공동으로 개발한 지표로, 중국의 7대 신흥 전략 산업(차세대 정보기술(IT),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바이오산업, 고급 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EV))의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함. 이는 중국이 미래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들의 경기 현황을 나타냄.

그림 1. 제조업 PMI 추이



자료: wind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의 경우 2025년 -3.8%에서 올해 일사분기 1.7%로 전환되며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8.9%의 증가율을 보인 인프라 투자의 공헌도가 가장 컸다. 특히 투자 전반에 있어 컴퓨팅과 소프트·하드웨어 분야가 4.7%, AI와 휴머노이드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가 45.5%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소위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 확충에 투자가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반면, 내수(內需) 소비는 전반적으로 자생적 회복력이 지연되는 분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은 2.4%에 그쳤으며, 고질적인 부동산 투자 침체는 가계 자산 가치와 가처분 소득 하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의 부채수입비율(債務收入比) 상승을 야기, 이들의 소비 지출 감소를 지속해서 초래하고 있다.<sup>5)</sup> 특히 높은 청

년 실업률은 고용 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다. 즉, 수출이 상당히 눈에 띄는 호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용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과거 주기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우선, 수출 구조가 전기차·반도체·전력 설비 등 자본 및 기술 집약적 방향으로 고도화되면서 수출 1달러당 창출되는 일자리 수 자체가 감소한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제조업 전반에 걸쳐 과잉 공급 상태가 광범위하게 지속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설비의 가동률(产能利用率)을 끌어올리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도 노동시장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위와 같은 전반적인 내수 정체는 그동안 가격 요소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 등 중국 경제 침체의 단

5) 兰小欢(2024), 置身事内: 中国政府与经济发展, 上海人民出版社, pp.183-184

그림 2. 제조업 부가가치 추이



자료: wind

면을 보여왔으나, 올해 들어 지표상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선 장기간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했던 PPI(생산자물가지수)가 올해 3월 들어 0.5%를 기록하며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 역시 지난 분기들의 낙폭을 만회하며 -0.06%를 기록, 0에 바짝 근접했다. 동기간 CPI(소비자물가지수) 또한 1.0% 내외의 정(正)의 성장을 나타냈다.

이러한 물가 반등은 전통 제조업의 과도한 출혈경쟁을 지양하는 ‘반(反) 내권(內卷)’ 정책<sup>6)</sup>을 통해 시장의 고질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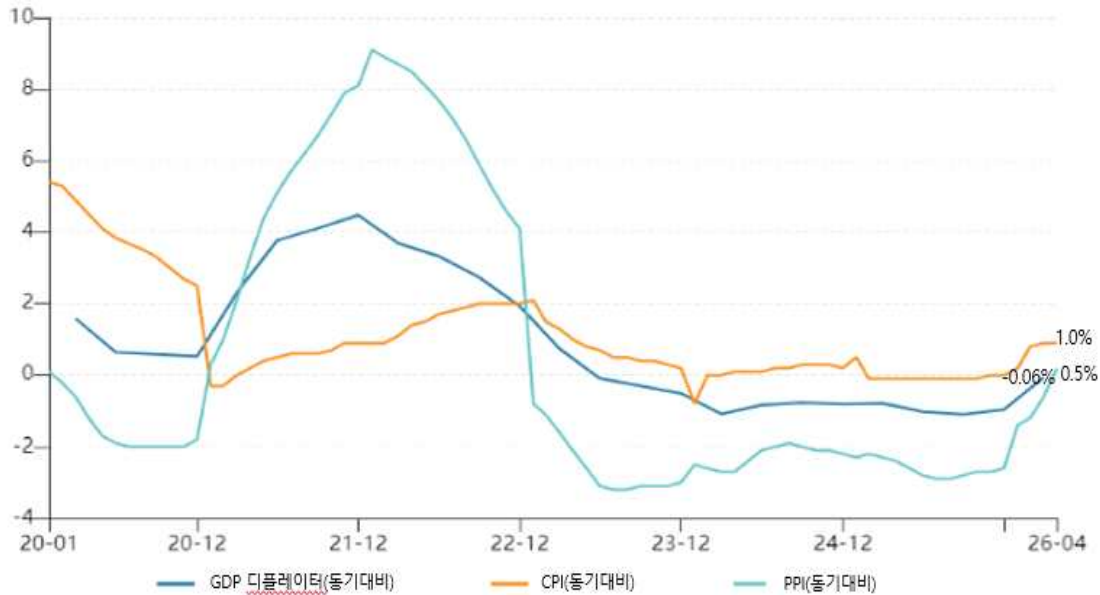
‘공급 과잉 및 수요 부족(供強需弱)’ 모순을 개선하고, 가격과 이윤율의 회복을 촉진한 것이 주요 배경으로 풀이된다.<sup>7)</sup> 이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물가의 합리적 수준 회복’을 촉진하고, 나아가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기업 이익 및 가계 소득의 선순환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동산 부문은 주택 구매 보조, 기존 주택의 정책적 수매,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 조합에 힘입어 상하이의 기존 주택 거래량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6) 과잉 공급과 저가 수수 및 가격 경쟁으로 크게 나뉘는 내권(內卷) 현상 예방을 위해 비효율적인 과잉 설비의 질서 있는 퇴출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국유기업은 인수 합병 기금으로 저효율 자산을 정리하고, 민간 기업은 과도한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포석임. 아울러 전국 단위의 통일된 시장을 구축하여 지방정부 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招商引資)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임.

7) 2025년 8월 이후 전해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등 고에너지 소비 업종이 생산능력 규제에 직면하면서, 공급 축소가 가격 하한선을 지지하는 효과로 악성 가격 경쟁을 억제한 것이 하나의 예임.

그림 3. 가격 지수 추이



자료: wind

등 일정 부분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판매 면적과 투자액이 2021년 고점 대비 각각 48%, 62%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재고 해소 기간(21개월)이 역사적 고점에 달해 자산 가치 하락과 가계의 소비 심리 위축을 일으키고 있다. 즉, 소득 회복 속도가 완만한 가운데 고용 시장의 구조적 모순까지 겹치면서, 소비 동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미시 주체의 투자와 소비 부진과는 별개로, AI 기술 발전과 자본시장 회복에 힘입어 정보기술 및 금융 서비스업 등 제3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제2차 산업(제조업) 성장률을 앞지르고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AI 기술이 전자상거래, 콘텐츠, 소셜 플랫폼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지능화(Physical AI)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특히 5G, 데이터 센터,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 등 ‘신형 인프라’ 건설이 가속하며 이러한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 발전을 탄탄히 뒷받침하고 있

다. 다만, 이와 같은 신흥 산업과 전통 산업 간의 교체 과정에서 총수요가 일부 수축하고, 업종 내 과도한 출혈경쟁(内卷)으로 인해 기업 이익 악화와 디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점은 위험 관리 관점에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 2. 지방 재정의 구조적 건전화 추진과 중장기 위험 요인

중국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 수준이 대차대조표 확장을 여전히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보다는 부채 위험 완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026년 양회 기간 제시된 초장기 특별 국채 관련 재정 투입 규모는 2025년 수준과 궤를 같이하는 총 1조 3,000억 위안 규모로, 주로 국가 중대 전략 및 안보 역량 건설 프로젝트(两重·양중)와 설비 갱신 및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两新·양신)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이 같은 초장기 특별 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 등을 합산한 2026년 광의 적자율은 약 8.1%로, 2025년(약 9.0%) 대비 하락하였다. 이는 중국 당국이 무분별한 경기 부양 대신 재정 정책

의 정상화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채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단순 소비성 지출이 아닌 AI, 양자 기술, 반도체 등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 확충과 ‘兩重·兩新’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채무 상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욱이 8.1%라는 수치에는 지방정부의 음성 채무를 정식 법정 채무로 전환하는 대환 규모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의 절대량을 늘리기보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양성화한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중국 지방 재정 위험 관리의 핵심 관찰 포인트는 지방정부용자플랫폼(LGFVs)<sup>8)</sup>이 전통적인 인프라 건설 중심에서 시장 지향적인 ‘산업 투자 플랫폼(产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산업 투자 플랫폼은 단순한 자금 조달 창구를 넘어 지역 경제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자체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춘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중국의 도시화율이 65%~70% 수준에 도달하며 과거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수요가 많이 감소함에 따라, LGFVs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중앙정부 역시 위험 관리를 엄격히 강화하고 있으며, 2026년 양회에서 표명된 바와 같이 음성 부채뿐만 아니라 은행 융자나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운영성 부채 투입 프로젝트의 건전성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근본적인 지향점은 LGFVs를 과거의 단순한 ‘정부 대리 용자 중개자’에서 ‘지역 경제 발전의 자립적 엔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있다. 과거의 LGFVs가 주로 정부 보조금이나 인프라 건설 대금 회수에 의존했다면, 새로운 플랫폼은 시장화된 운영 수입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는다.

당국은 위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LGFVs를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처리 방침을 시행 중이다. 첫째, 실제 사업이 없는 ‘유령(空壳, 공커)’ 회사이다. 실질적인 운영 사업이 부족하거나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자생력을 상실한 플랫폼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하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말 기준 전국 LGFVs의 수와 부채 규모는 2023년 3월 정점 대비 71% 감소하는 강력한 구조조정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공익형 LGFVs이다. 도로, 상수도, 대중교통 등 수익성은 낮으나 공익적 가치가 큰 인프라를 담당하는 유형으로, 이 중 존속 가능성이 큰 기업은 공공 서비스를 전담하는 기능적 국유 기업으로 전환하여 관리한다. 이들은 이제는 부채 조달의 중개자가 아닌, 실질적인 자산운용 및 서비스 제공 주체로 재편된다. 셋째, 상업·영리형 LGFVs이다. 이는 일정한 시장 경쟁력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산을 보유, 독자적인 시장 경영 주체인 산업 투자 플랫폼이나 도시 운영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기업은 국유자 산관리 체계 내에 속하더라도 이제는 정부 신용이 아닌 자체적인 시장 운영 수입에 의존하며, 민간 기업과 같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정부의 관련 시장 규제를 지속해서 받게 된다. 이처럼 중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 중 하나로 대두되어 온 지방정부 부채 이슈는 당국의 체계적인 통제 조치 속에서 경감되고 있으나, 이 개혁이 2026년 하반기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거시 성과로 안착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 경제가 중장기적인 안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구조조정 외에도 해묵은 대내외 당면 과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

8) LGFVs(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지방정부가 일종의 회사인 투자공사(Urban Investment & Trust Corporation)를 설립한 후 그것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인프라투자재원으로 활용함. 노무라증권(2013)은 LGFVs의 본질은 장기 투자상품을 위해 단기 신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로서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을 언급함.

다. 내부적으로는 가속화(부양비 46% 도달)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가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노동력 감소를 유발하며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보호주의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공급망 충격 위험이 남아 있으며, 특히 미국의 대중국 고강도 견제 정책 변화는 중국의 대외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상시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 3. 지표와 체감의 괴리:

#### 중국 경제 '4대 분화'와 당국의 대응

2026년 중국 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네 가지 영역에서의 '분화(Divergence)' 현상이며, 향후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은 이로 인한 내부 불균형을 재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4대 구조적 분화 현상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급과 수요의 분화 (생산 확장과 물가 정체의 괴리): 가장 고질적인 특징으로, 산업 생산과 서비스업의 견고한 공급 능력보다 가계와 기업의 최종 수요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일부 전통 산업에서 과도한 저가 수주 경쟁인 '내권(内卷)' 작용이 심화하면서 기업 이익이 악화하였고, 이는 다시 임금 상승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이러한 공급-수요 불일치는 전반적인 물가 하락 압력의 주된 배경이 되어왔다.

② 외수(外需)와 내수(內需)의 분화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 글로벌 무역 보호주의 속에서도 중국은 아세안(ASEAN),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며 2025년 약 1조 2,000억 달러라는 역사적 최고치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강한 외수 회복 탄력성을 보였다. 반면 내수의 경우, 고정자산투자가 202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간 마이너스 성장(-3.8%)을 기록했고 가계 소득 성장 둔화로 가전·자동차 등 대형 품목의 소비 증가세가 꺾이며 자생적 회복력이 정체되어 있다.

③ 첨단 제조의 도약과 부동산의 침체 (신구 동력의 단절): AI, 신에너지, 휴머노이드,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신흥산업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급부상하며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AI 관련 서비스업과 금융업이 포함된 제3차 산업 성장률(5.4%)이 제2차 산업(4.5%)을 앞질렀다. 그러나 과거 성장의 견인차였던 부동산 투자가 지난 2025년 1사분기 전년 대비 -29.5%까지 급락한 이후 여전히 바닥을 탈출하지 못하면서,<sup>9)</sup> 첨단 산업의 도약이 부동산의 공백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하는 단절 현상이 뚜렷하다.

④ 거시 데이터와 미시 체감의 분화 (성장률과 고용의 괴리): 2026년 1사분기 GDP 성장률은 5.0% 수준을 기록하며 지표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와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역사적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체 공식 실업률은 5.2% 내외로 통제되는 반면, 청년 실업률(16~24세)은 16.5%에 달해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미래 소득 기대감 위축이 한층 심화한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전방위적 분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물적 투자 중심에서 '공급-수요의 구조적 재균형'과 '인적 투자' 확대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과잉 설비의 자연스러운 도태를 유도하고 전국 단위의 통일된 시장을 구축하여, 기업들이 소모적인 가격 치킨게임이 아닌 기술과 품질로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반(反) 내권(内卷)'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단기 유동성 위험을 방어하고 미시 주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통화 금융 정책의 공조도 적극적이다. 인민은행

9) 주요 10대 도시의 주택 재고 해소 기간이 21개월에 달해 부동산 시장의 내생적 회복은 여전히 요원

(PBOC)은 농업, 소형 소상공인, 기술 혁신 분야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재대출 및 재할인 도구 금리를 25bp 하향 조정했다. 또한 기술 혁신·설비 갱신 재대출 한도를 4,000억 위안 증액하고 1조 위안 규모의 민영 기업 전용 재대출을 신설했다. 중앙은행은 국채 매매를 상시적인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삼아 장단기 시장 금리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있으며, 완전역레포(Outright Reverse Repos)와 중기유동성 지원창구(MLF) 조작을 통해 국채 발행을 뒷받침하는 등 물가 회복을 위한 완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2026년도 경제 운용의 가장 근본적인 축은 '인적 투자(Spending on People)로의 재정 구조 전환'이다. 과거 도로, 철도 등 물적 자산에만 집중했던 투자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육, 사회보장, 의료 등 민생 안정에 대한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2026년 공공 재정 예산 중 민생 관련 지출 비중은 이미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의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얼어붙은 미시 소비 심리를 근본적으로 복원하려는 장기적 선순환 전략으로 분석된다.

#### 4. 결론 및 전망: 15·5 계획의 원년, 구조적 재균형과 신성장 동력 안착을 위한 과제

2026년 중국 경제는 제15차 5개년 계획(15·5 계획)의 원년을 맞아 중장기 경제 성장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에서 있다. 대내외 여건을 종합할 때,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정부의 구간 목표치인 4.8%~5.0% 수준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 AI와 첨단 제조 분야가 새로운 혁신 동력으로 부상하고, 신흥 시장 중심으로 수출 노선을 다변화하면서 일사분기 5.0% 성장을 기록한 것은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출발점이 되었다. 여기에 기준율

(RRR) 50bp 및 기준금리 10~20bp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어 거시경제 전반에 완화적 금융 환경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국의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연초 유동성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GDP 디플레이터를 기존의 -1.0% 수준에서 -0.2% 내외로 축소하는 등 고질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을 유의미하게 완화하는 선순환을 지향하고 있다.<sup>10)</sup> 그러나 지표의 안정세와 달리 경제의 완전한 선순환을 구축하기까지는 내생적 위험 통제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고도기술 제조업과 첨단 기술 수출이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 침체 장기화와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미시 주체의 체감 경기 위축은 내수 회복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 요인이다. 연초 설정한 성장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적 자산 투자를 넘어 민생 보장을 통한 내수 진작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주도적으로 대차대조표를 확장하며 재정 자원을 조기 집행(Front-loading)하는 한편, 소비재의 친환경 교체를 지원하는 '이구환신' 정책과 문화·관광·외식 등 서비스 분야의 소비 쿠폰 발행을 병행하여 서비스 주도의 소비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사회보장 급여를 인상하고 근로자 임금 성장률을 명목 GDP 성장률에 부합하도록 견인하는 '도농 주민 소득 증대 계획'을 통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보완하고 있다.

내수의 또 다른 축인 투자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조절하는 핀셋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초장기 특별 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활용하여 시장의 유휴 토지와 주택 재고를 매입한 뒤, 이를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전환함으로써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을 '신안정 상

10) 2026년 일사분기 -0.06% 기록은 12분기(3년)만의 가장 긍정적인 수치로 직전분기 GDP 디플레이터 -0.8% 대비 개선됨.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물가의 합리적 회복을 통화 정책의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는다'라고 명시,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가 단순한 '성장 보장'에서 '기대 심리 안정과 디플레이션 방어'로 심화하였음을 의미함.

태(New Steady State)'로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 구매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폐지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스마트·친환경 중심의 '좋은 집(Good Houses)' 공급에 집중하여 실거주자의 개선형 교체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나아가 인프라 투자의 경우, 15·5 계획의 주요 공정들을 연초에 집중적으로 개시하고 AI 연산 네트워크와 데이터 센터 등 '신형 인프라(New Infra)' 건설에 재정을 우선 배정하여 '신질 생산력(新质生产力)' 발전을 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공익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주도하고, 지방정부는 '6+4+2 부채 해결 프레임워크'<sup>11)</sup>를 통해 음성 부채 위험을 관리하며 지역 민생과 신흥산업 지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 효율화를 도모한다.

중장기 혁신 동력이 될 15·5 계획 기간(2026~2030) 동안 중국은 기술 자립 자강(科技自立自强)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두고 산업 구조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지능형 커넥티드 전기차(ICV), 항공우주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비중을 높여 2030년까지 핵심 산업 규모를 10조 위안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를 양자 기술, 바이오 제조, 수소 및 핵융합, 구체화한 AI 등 미래 산업 배치의 원년으로 삼아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 마더 머신, 핵심 소프트

웨어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 병목(卡脖子)' 분야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기초 연구에 공공 기금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산업의 연결고리는 자본시장 개편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 당국은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기술력을 갖춘 하드 기술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홍콩 거래소의 특수 기술 기업 상장 규정(18C)과 본토 커창반의 '1+6 신정' 개혁<sup>12)</sup>을 도입하여 진입 문턱을 낮추었다.<sup>13)</sup> 동시에 핵심 장비 분야에 M&A 기금을 투입함으로써 단기 성과에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의 국가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본토와 홍콩 시장 간의 연결성 확대를 통해 대형 테크 기업들의 동시 상장(A+H)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견인하고 있다.<sup>14)</sup>

결론적으로 2026년 중국 경제의 연착륙과 지속 가능한 성장은 향후 세 가지 구조적 패러다임 전환이 얼마나 실질적인 내수 반등을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첫째, 가격이 아닌 기술과 품질로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반(反) 내권(内卷)' 정책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여 공급 과잉과 저가수주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 부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LGFVs(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를 성공적인 산업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리스크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물적 인프라 중심의 효율성 낮

11) 3단계로 구분된 조치를 통해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을 뜻하는데, 6+4+2 중 6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6조 위안의 자금을 직접 투입, 지방정부의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이며, 4는 지방정부의 기존 부채를 4조 위안 규모로 구조 조정하거나 스와프(교환)하여 상환 부담을 줄이는 정책임. 마지막으로 2는 2조 위안 규모의 민간 및 국유 자본을 유치하여 부채 상환에 활용한다는 포석임.

12) 2025년 6월 중국 증권 감독 관리위원회(CSRC)가 발표한 커창반(STAR Market, 과학기술혁신판)의 심층 개혁을 위한 일련의 정책 패키지로 '1개의 총체적 지침(深化科创板改革, 커창반 개혁 심화)과 '6개의 구체적 실행 조치'로 구성되어 있음.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하드 기술(硬科技)'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지원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임.

13) 동 계획은 홍콩 IPO 시장의 전략적 요충지화로 연결되는데, 홍콩 거래소는 로봇,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기업을 위해 완화된 상장 기준을 적용하며, 이를 통해 혁신 기업의 글로벌 자금 조달 허브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함.

14) 15·5 계획은 중국 경제를 '비용 주도'에서 '기술 프리미엄 및 성장의 확실성'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이에 따라 IPO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부동산이나 단순 소비재 대신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제조 및 신에너지 관련 기업이 상장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임.

은 관성적 투자를 과감히 탈피하고, 교육·의료·사회보장 등 가계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여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근본적으로 깨울 수 있는 '인적 투자(Spending on People)'로의 구조적 전환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부 개혁의 성과 유무가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방은 물론, 긴밀하게 얽혀 있는 한국 및 글로벌 공급망에 구조적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黄奇帆,刘世锦,蔡昉(2025), 中国经济解码, p.9, 中国经济周刊, 12位经济学家的思享课, 人民出版社, pp.3-99
- 兰小欢(2024), 置身事内: 中国政府与经济发展, 上海人民出版社, pp.171-279
- 国新证券(2026), 一季度进出口较高增长. 一季度进出口数据解读, 宏观研究, pp.1-4
- 李超·林成炜·潘高远·费瑾·王瑞明(2026), 如何解读强开局背后的弱修复?, 浙商证券, pp.1-5
- wind(万得金融终端)의 경제데이터베이스(EDB) 통계 및 동 3c会议 자료
- 박진오(2024), 중국 지방정부 부채 구조에 관한 소고(小考) - 부채 형성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을 중심으로-, 中国地域研究 第11卷 第1号(通卷30号), pp.282-288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4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